



넥서스 리서치 2026_96 · NR-2026-096 · 제96호

새 통장의 하루 한도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한도제한계좌의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을 정하는 규범의 층위 · 2026년 9월 기준 은행·증권 다섯 기관 공시 비교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면 그날부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정해진다. 창구에서 300만원, 현금인출기와 앱에서 각각 100만원이다. 2024년 5월 1일까지는 창구 100만원, 현금인출기와 앱이 각각 30만원이었다.

계좌를 만들 때 무엇에 쓸 통장인지 확인하는 의무는 2024년 8월 28일 법률에 생겼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와 무엇을 내면 풀리는지는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이 함께 만든 개선방안과 은행 내부기준이 정한다.

하루 금액은 다섯 기관이 똑같고, 푸는 요건과 걸리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다. 연구소는 금액보다 요건 쪽을 먼저 손볼 자리로 본다. 요건을 같은 양식으로 공시하게 하는 일은 자율규제 층위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발행일

2026년 9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분량

PDF 24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새로 만든 통장의 하루 금액을 누가 정하고, 그 금액을 푸는 요건은 어느 규범에 적혀 있는지 물었다.

무엇을 알아냈나

금액과 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은행 내부기준이다. 은행·증권 다섯 기관의 하루 금액은 창구 300만원, 현금인출기 100만원, 앱 100만원으로 같다. 서류를 내고 푸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섯 기관 가운데 두 곳만 5영업일로 적었고 세 곳은 적지 않았다. 실적으로만 풀면 석 달이 걸린다. 네 사람이 사는 집이 한 달 살림 돈을 앱으로만 보내려면 이례가 걸린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통장을 만든 자리에서 세 채널의 하루 금액과 푸는 서류 목록을 함께 받아 적는다. 목록에 자기 처지에 맞는 항목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항목이 있는지 물어본다.

500배

일반 통장은 하루에 5억원까지 보낼 수 있고, 새로 만든 통장은 100만원까지이다. 2026년 9월 기준 우리은행 공시와 금융위원회 발표를 나란히 놓은 값이다.

차례

1장	질문금액을 정한 규범이 무엇인지 묻는다	3
2장	현황다섯 기관의 금액은 같고 요건은 다르다	5
3장	구조의무는 법률에 있고 금액은 내부기준에 있다	8
4장	분포서류를 뚫 수 있는 사람과 못 뚫 사람이 갈린다	11
5장	빈 곳몇 사람이 걸려 있는지가 공표되지 않는다	15
6장	할 일가장 빨리 바뀌는 층위는 자율규제다	16
부록	용어 풀이 · 자료 출처와 각주	19

1장 · 하루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공동 개선방안이 정한다

금액을 정한 규범이 무엇인지 묻는다

36.6% 혼자 사는 집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25년 기준 · 국가데이터처 국가지표체계	8년 2016년 도입부터 하루 금액이 오른 2024년 5월까지의 기간 2024년 5월 기준 · 금융위원회 발표	500배 일반 통장과 새 통장이 하루에 앱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차이 2026년 9월 기준 · 우리은행 공시와 금융위원회 발표
---	---	--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면 그날부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정해진다. 창구에서 300만원,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원,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100만원이다. 현금인출기는 뽑는 것과 보내는 것을 따로 세어 각각 100만원이다. 채널은 이렇게 넷이다.

이 금액은 2024년 5월 2일에 올랐다.² 그 전에는 창구 100만원, 현금인출기와 앱이 각각 30만원이었다. 앱으로 하루 30만원은 네 사람이 사는 집의 한 달 살림 돈을 보내는 데 스무이틀이 걸리는 금액이다.³ 이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되었다.⁴

법이 정한 것은 목적을 확인할 의무까지이다

2024년 8월 28일부터 법률이 은행에 한 가지를 시킵니다. 통장을 열어 줄 때 무엇에 쓸 통장인지 확인하는 일이다.⁵ 증빙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⁶ 서류가 넉넉하지 않으면 은행은 한도제한계좌로 열어 줄 수 있다. 법령이 적은 것은 여기까지이다.

하루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는 법령에 없다. 무엇을 내면 풀리는지도 없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이 2024년에 함께 만든 개선방안과 각 은행의 내부기준이 정한다.⁷ 규범의 층위로 보면 자율규제와 내부기준이다. 실명을 확인하라는 법률은 따로 있지만, 하루 금액을 정한 조문은 그 법률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⁸

이 보고서는 금액과 요건을 정하는 자리를 묻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8일 이 제도를 이렇게 적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는 서술이다.⁹ 그 뒤 2024년 5월에 금액이

계좌를 만들 때 목적을
확인하라는 의무는 법률에
있다. 하루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는 법률에 없다.

한도제한계좌

새로 만든 입출금 통장
가운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낮게 정해진 통장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도
적는다.

올랐고, 2024년 8월에 법률에 목적 확인 의무가 생겼다. 두 가지가 다 지나간 2026년 9월에도 금액과 해제 요건은 법령 밖에 있다.

혼자 사는 집은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6%이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넘고, 2000년에는 15.5%였다.¹⁰ 혼자 통장을 만들고 혼자 서류를 떼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요건을 정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만 묻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새로 만든 통장이 한도제한계좌인지 상품 이름으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 통장 표지의 상품명

2 창구·현금인출기·앱 세 채널의 하루 금액을 각각 따로 확인한다. 세 값이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이체한도 안내 화면,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하루 3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적이 있는 통장이면 이 장의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2장 · 다섯 기관의 금액은 같고 해제 요건은 다르다

다섯 기관의 금액은 같고 요건은 다르다

2,225억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2026년 4월 기준 · 경찰청

4,739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2026년 4월 기준 · 경찰청

5곳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서로 똑같은 은행·증권 기관 수

2026년 9월 기준 · 각 기관 공시

이 장은 확인된 값만 적는다.

비교축 · 시계열

같은 네 채널의 금액을 세 시점에 놓고 본다. 금액이 오른 2024년 5월 2일과 법률이 시행된 2024년 8월 28일, 그리고 그 앞의 여덟 해이다. 세 시점을 고른 까닭은 하나이다. 금액이 바뀐 날과 규범이 바뀐 날이 서로 다른 날이기 때문이다.

금액은 2024년 5월에 다섯 기관이 똑같이 맞췄다. 요건은 맞추지 않았다.

세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만 두 번 움직였다

<표 1>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은 2024년 5월에 올랐고, 그 금액을 정한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한도제한계좌 · 채널별 1일 금액 · 2016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단위: 만원)

시점	창구	현금인출기 인출	현금인출기 이체	앱· 인터넷	이 금액을 정한 자리
2016년 도입 ~ 2024년 5월 1일	100	30	30	30	은행 내부기준
2024년 5월 2일 ~	300	100	100	10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 개선방안
2024년 8월 28일 ~	300	100	100	100	법률에 목적 확인 의무 신설, 금액은 은행 내부기준
참고 · 사기이용 이력 계좌	100	30	30	30	금융위원회 발표

주: 2024년 5월 2일은 시행일이고, 농협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은 5월 10일부터 적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금액(현금인출기·앱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그대로 두었다. 도입 뒤 2024년 5월까지 금액이 바뀐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기이용 이력 계좌는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종전 금액이 적용되는 계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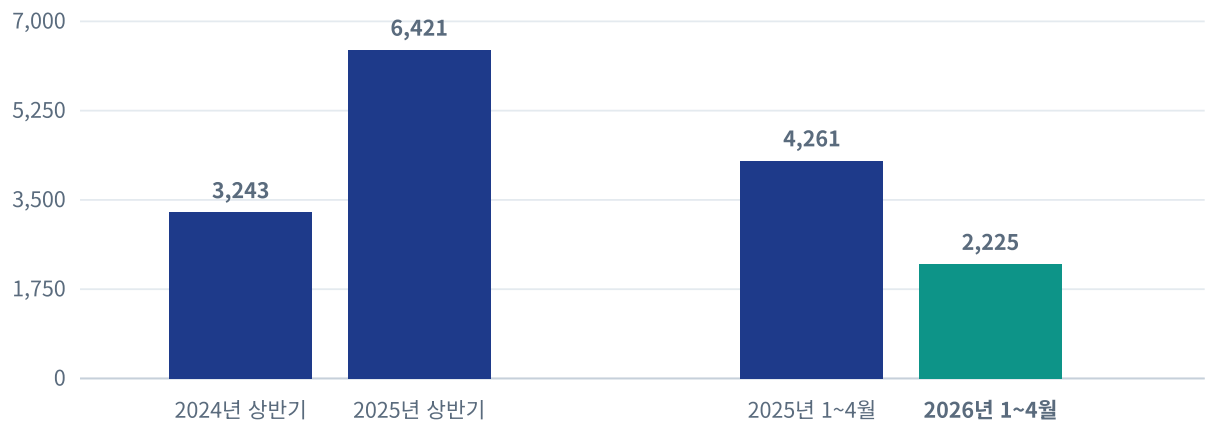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발표, 2024. 정책브리핑 전재본(부록 나 자료 1).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 2023.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자료 2).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이 제도가 막으려는 것은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쓰는 보이스피싱이다. 경찰청 집계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액은 2,225억원, 발생 건수는 4,739건이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은 4,261억원과 8,268건이었다. 피해액은 48%, 건수는 43% 줄었다. 한 건으로 환산하면 4,700만원 남짓이다.¹¹

[그림 1]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5년 상반기에 갑절로 늘었다가 2026년에 절반으로 줄었다

경찰청 집계 · 기간이 같은 것끼리만 견준 값

(단위: 억원)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상반기 두 값끼리, 1~4월 두 값끼리만 견준다. 기간 길이가 달라 네 값을 한 줄로 잇지 않는다.

자료: 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K-치안 구현」, 2026. 정책브리핑 전재본.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비교축 · 인접 제도

같은 제도를 은행과 증권사가 나란히 운영한다. 다섯 기관이 누리집에 적어 둔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을 그대로 놓고 견준다.

다섯 기관의 금액은 같고 요건은 다르다

<표 2> 하루 금액은 다섯 기관이 똑같고, 푸는 요건과 걸리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다

은행 2곳·증권 3곳 · 각 기관 누리집 공시 · 2026년 9월 13일 확인

(단위: 만원)

기관	창구·지점	현금인출기	앱·인터넷	서류를 냈을 때 걸리는 기간	실적으로 푸는 길
KB국민은행	300	100	100	영업점 제출, 기간 미공시	석 달 연속 건별 150만원 이상 급여이체
하나은행	300	100	100	확인하지 못함	확인하지 못함
삼성증권	300	100	100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기준 금액·기간 비공개
유안타증권	300	100	100	모바일 최대 5영업일	우대등급 또는 거래실적 충족 시 자동

기관	창구·지점	현금인출기	앱·인터넷	서류를 냈을 때 걸리는 기간	실적으로 푸는 길
미래에셋증권	300	100	100	확인하지 못함	최근 석 달 50만원 이상 순거래 실적

주: 현금인출기 금액은 인출과 이체를 각각 100만원으로 적은 값이다. '확인하지 못함'은 그 기관 누리집에 값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삼성증권은 자동 전환의 상세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안타증권은 현금인출기 인출 금액만 적었다.

자료: KB국민은행·하나은행·삼성증권·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 공시(부록 나 자료 7·9·12·13·14).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표 2에서 갈라지는 것은 오른쪽 두 칸이다. 금액은 2024년 5월 공동 개선방안으로 맞춰졌고, 요건은 남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하는 기관의 해제 요건이 서류 경로인지 실적 경로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기관 누리집의 한도제한계좌 안내 화면

2 실적 경로라면 몇 달의 실적을 요구하는지, 건별 금액 기준이 붙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해제 기준 항목,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서류를 내서 풀린 통장이라면 실적 기준은 볼 것이 없다.

3장 · 목적 확인 의무와 금액 기준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의무는 법률에 있고 금액은 내부기준에 있다

1,7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사람이 입은 피해액 2023년 기준 · 금융감독원	98.1% 2025년 상반기 피해액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정도 2025년 6월 기준 · 경찰청	4단 이 제도를 받치는 규범의 층위 수 2026년 9월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	--	--

서류를 받아 두면 은행이 부담을 덜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사기에 쓰이면 은행이 부담을 진다. 검사와 제재를 받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고 피해자 한 사람당 약 1,700만원이다. 2022년은 1,451억원이었다. 한 해에 514억원, 35.4% 늘어난 값이다.¹¹

통장을 열어 줄 때 서류를 받아 두면 은행에는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을 낮게 두면 사고가 터져도 빠져나간 돈이 적는다. 은행 쪽에는 금액을 낮게 두고 서류를 넓게 받을 이유가 둘 다 있다. 그 비용은 통장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진다.

규칙이 이 제도를 막은 것이 아니다. 규칙이 비어 있던 자리에 이 제도가 들어섰다.

금융감독원 집계와 경찰청 집계는 세는 기준이 달라 한 줄로 잇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값은 2023년까지, 경찰청 값은 2024년 이후이다.

법령 근거가 없는 채로 여덟 해가 지났다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이 제도에는 법령 근거가 없었다. 근거가 없으니 금액을 정한 문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다. 규칙이 비어 있어서 이 행동이 만들어졌다.

2024년 8월 28일 법률이 생긴 뒤에도 법률이 정한 것은 목적을 확인할 의무이다.⁵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그대로 은행 내부기준에 남았다.

세 기관이 잇달아 지적한 뒤에 금액만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에, 감사원이 2023년에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권고했다.⁹ 세 기관이 잇달아 지적한 결과는 2024년 5월의 금액 상향이다. 창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채널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요건은 그대로 남았다. 금액은 공동방안 하나로 다섯 기관이 한 값으로 맞출 수 있었고, 요건은 기관마다 다르게 남았다.

지금 이 제도를 받치는 규범은 네 단이다

첫째 단은 법률이다. 계좌를 열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여기 있다. 둘째 단은 시행령이다. 증빙서류를 서면·팩스·전자우편 같은 방법으로 요청한다는 절차가 여기 있다.⁶ 셋째 단은 자율규제이다. 하루 금액을 네 채널에서 얼마로 할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 개선방안이 정했다. 넷째 단은 은행 내부기준이다. 무엇을 내면 풀어 주는지가 여기 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빨리 되돌아간다.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은 아래 두 단에 있다. 연구소는 이 배치가 2016년부터 바뀌지 않은 것을
이 제도의 특징으로 본다.

깊이 보기 · 가

은행과 증권사는 같은 제도를 서로 다른 근거로 적는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이 제도의 근거를 법률 조문 번호로 적었다.¹²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이라고 적었다.⁷ 같은 제도인데 한쪽은 법률을, 다른 쪽은
자율규제를 근거로 내놓다. 근거를 법률로 적으면 하루 금액도 법률이 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금액은 그 아래 두 단에 있다.

재구성 값 가

한 달 살림 돈을 앱으로 보내는 데 이레가 걸린다

공시된 하루 금액만 보면 100만원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한 달 기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나눠 보았다. 나온 값은 날수이다. 어느 공표 자료에도 이 날수는 없다.

계산식

필요 일수 = 한 달에 쓰는 돈(원) ÷ 그 채널의 1일 금액(원), 소수는 올림

한 달에 쓰는 돈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이다. 1일 금액 · 금융위원회 2024년 5월 발표와 다섯 기관 공시가 일치하는 값이다. 입력값은 모두 1차 자료와 기관 자체 공시에서 가져왔다.

<표 3> 가구원 수가 늘면 필요한 날수가 늘고, 창구와 앱의 날수 차이도 벌어진다

(단위: 원, 일)

원자료와 계산 결과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	앱·현금인출기만 쓸 때	창구만 쓸 때	두 값의 차
1인	2,564,238	3	1	2
2인	4,199,292	5	2	3
3인	5,359,036	6	2	4
4인	6,494,738	7	3	4
참고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20,556	1	1	0
참고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2,078,316	3	1	2

주: 앱·현금인출기 1일 금액 100만원, 창구 300만원으로 계산했다. 하루에 한 번 보낸다고 놓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를 주는 기준선이고 실제 지출 조사값이 아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2025. 정책브리핑 전재본(부록 나 자료 15). 금융위원회 발표, 2024. 정책브리핑 전재본(자료 1).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네 사람이 사는 집이 한 달에 쓰는 돈을 앱으로만 보내려면 이레가 걸린다. 같은 통장인데 창구 쪽이 나흘 짧다. 앱을 쓸수록 불리한 구조이다. 사기이용 이력이 있는 계좌는 앱 1일 금액이 30만원이어서 같은 돈에 스무이틀이 걸린다.¹³ 일반 통장으로 바뀌면 하루에 5억원까지 보낼 수 있어 하루에 끝난다.¹⁴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어느 은행을 권하거나 물리치는 값이 아니다. 공시된 하루 금액에 정부가 고시한 한 달 기준 금액을 넣어 본 사례 계산이고, 특정 가구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다. 한도를 피해 가는 방법도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급여 기준으로 고시한 값이고 실제 지출 조사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날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같지 않는다.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거래하는 기관이 이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적었는지 공동 개선방안으로 적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기관 누리집의 한도제한계좌 안내 화면 맨 아래 근거 표기

- 2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이 은행 내부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기관을 고른다.

확인하는 곳 · 두 기관 이상의 해제 요건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근거 표기가 다르다는 것이 어느 기관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는다. 표기만으로 기관을 바꿀 일은 아니다.

4장 · 서류가 있는 사람은 닳새, 없는 사람은 석 달이 걸린다

서류를 댈 수 있는 사람과 못 댈 사람이 갈린다

7일 네 사람 가구의 한 달 살림 돈을 앱으로만 보내는 데 걸리는 날수 2026년 9월 기준 · 재구성 값 가	22일 사기이용 이력이 있는 통장으로 같은 돈을 보내는 데 걸리는 날수 2026년 9월 기준 · 재구성 값 가	3개월 서류 없이 실적으로만 푸는 사람이 기다리는 기간 2026년 9월 기준 · KB국민은행 공시
--	--	---

이 장은 평균을 쓰지 않는다. 먼저 통장의 종류로 갈라 보고, 그다음 사람의 처지로 갈라 본다.

재직증명서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서류를 낸다.
실적으로만 풀어야 하는 사람은 석 달을 기다립니다.

재구성 값 나

서류가 있는 사람은 닳새, 없는 사람은 석 달이다

기관들은 해제 요건을 주로 항목으로만 적었고, 며칠이 걸리는지는 두 곳만 적었다. 그래서 요건이 요구하는 실적 기간과 신청 처리 기간을 더해 가장 짧은 기간을 냈다.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실적을 쌓아야 하는 사람의 기다리는 기간이 여기서 갈라진다.

계산식

최단 기간 = 요건이 요구하는 실적 기간 + 신청 처리 기간 (서류 경로는 실적 기간 0)

실적 기간 · 각 기관이 공시한 연속 실적 요구 개월 수이다. 처리 기간 · 각 기관이 공시한 신청 처리 영업일이다. 두 값 모두 2026년 9월에 기관 자체 공시에서 확인했고, 공시되지 않은 칸은 기간을 내지 않았다.

<표 4> 같은 제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 닳새와 석 달로 갈라진다

원자료와 계산 결과

푸는 길	요건	실적 기간	처리 기간	가장 짧은 기간
은행 · 급여 서류를 영업점에 낸다	급여 증빙 서류	없음	공시되지 않음	확인하지 못함
은행 · 급여 실적으로 푼다	석 달 연속 건별 150만원 이상 급여이체	3개월	자동	3개월
은행 · 연금 실적으로 푼다	석 달 연속 건별 50만원 이상 공적연금 수령	3개월	자동	3개월
은행 · 우대 등급으로 푼다	스타클럽 상위 등급	확인하지 못함	자동	확인하지 못함
증권 · 서류를 낸다	목적별 증빙서류	없음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5영업일
증권 · 거래 실적으로 푼다	최근 석 달 50만원 이상 순거래	3개월	자동	3개월
목적 목록에 항목이 없다	해당 항목 없음	—	—	확인된 길 없음

주: 급여 실적 요건은 전월 말을 기준으로 세므로 실제로는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린다. 우대 등급에 드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내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자동 전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실적 경로에서 뺐다.¹⁵

자료: KB국민은행·하나은행·삼성증권·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 공시(부록 나 자료 7·8·9·12·13·14).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기관의 우열을 가리는 값이 아니다. 각 기관이 누리집에 적어 둔 요건을 그대로 놓고 가장 짧은 기간만 견준 것이다. 실제 처리 기간은 서류 상태와 지점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 표의 '확인된 길 없음'은 그런 사람이 통장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다. 다섯 기관이 공시한 목적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이다.

집단 구분

통장의 종류로 갈라 보았다

<표 5> 같은 사람이라도 통장 종류에 따라 하루 금액이 500배 넘게 벌어진다

(단위: 만원, 일)

통장 종류	창구	현금인출기	앱·인터넷	4인 한 달 살림 돈을 앱으로 보내는 날수
일반 통장(개인, 보안 1등급)	은행별	은행별	50,000	1
한도제한계좌	300	100	100	7
사기이용 이력 계좌	100	30	30	22

주: 일반 통장 앱 금액 5억원은 우리은행이 공시한 보안 1등급 기준이고 은행마다 다르다.¹⁴ 날수는 재구성 값 가의 계산 결과다.

자료: 우리은행 공시(부록 나 자료 10). 금융위원회 발표, 2024. 정책브리핑 전재본(자료 1). 유안타증권 공시(자료 13).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집단 구분

사람의 처지로 갈라 보았다

<표 6> 급여와 연금을 받는 사람만 비대면 자동 해제 길을 가진다

처지	내야 하는 서류	비대면 자동 해제 길	가장 짧은 기간
급여를 받는 사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있음	서류를 내면 열린다
연금을 받는 사람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있음	서류를 내면 열린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사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없음	고용주가 서류를 내줄 때까지
사업을 하는 사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없음	사업장 실사 일정에 달림
모임 회비를 모으는 사람	구성원 명부, 회칙, 정관, 대표자 입증서류	없음	회칙을 만든 뒤
살림만 하는 사람	본인 명의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주민등록 초본	없음	본인 명의 공과금이 없으면 확인된 길 없음
학생과 유학 준비자	입학허가증, 재학증명서, 비자	없음	해외 목적에 한해 열림
프리랜서	별도 항목 없음	없음	확인하지 못함

주: 다섯 기관이 공시한 목적 항목을 하나씩 세어 만든 표다. 프리랜서 항목은 다섯 기관 모두에 없었다.¹⁶¹⁷

자료: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삼성증권·유안타증권 공시(부록 나 자료 8·9·11·12·13).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이익과 부담 ·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줄어 생기는 이익은 통장을 쓰는 사람 모두가 함께 가진다. 2장에서 본 피해액 감소가 그 이익이다. 반대로 하루 100만원을 실제로 지는 쪽은 급여 증빙을 뗄 수 없는 사람이다. 살림만 하는 사람, 프리랜서, 학생은 목적 목록에 자기 자리가 없다. 이익이 큰 쪽과 부담을 지는 쪽은 같지 않는다. 혼자 사는 집 가운데 급여 증빙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 6의 위 두 줄과 나머지 여섯 줄이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이다. 남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지이다. 아르바이트는 고용주가 내줘야 하고, 모임은 회칙을 만들어야 하고, 살림만 하는 사람은 공과금이 자기 이름이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서류 목록에 자기 처지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기관 누리집의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안내 화면
- 2 맞는 항목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대신 인정되는 서류가 있는지 묻고, 답을 받은 날짜와 담당 창구를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통장을 만든 영업점, 기관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급여이체가 석 달 이어지고 있다면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풀리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5장 · 몇 사람이 제한되는지는 공표되지 않는다

몇 사람이 걸려 있는지가 공표되지 않는다

0건 새 통장이 몇 개인지 밝힌 공표 자료 수 2026년 9월 기준 · 정책브리핑·KDI 경제정보센터·국가지표체계 확인	2곳 자동 해제 요건에 개월 수와 금액 기준을 적은 기관 수 2026년 9월 기준 · 다섯 기관 공시	0곳 프리랜서를 금융거래 목적 항목에 둔 기관 수 2026년 9월 기준 · 다섯 기관 공시
--	---	---

몇 사람이 걸려 있는지 세어 둔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다

한도제한계좌가 몇 개인지 밝힌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 발표에도 이 숫자가 없다. 해제 신청·거절 건수와 실제로 걸린 기간의 통계도 마찬가지이다.¹⁸

숫자가 없으면 이 제도의 비용을 짚 수 없다. 하루 100만원이 불편한 사람이 10만 명인지 500만 명인지에 따라 금액을 올릴 이유의 무게가 달라진다.

요건에 금액과 기간까지 적은 기관은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이다

다섯 기관 가운데 자동 해제 요건에 개월 수와 금액 기준을 함께 적은 곳은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다. KB국민은행이 적은 요건은 넷이다. 우대 등급, 급여이체 실적, 연금수령 실적, 특정 통장의 주식거래 실적이다. 이

이 제도로 하루 100만원을 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 둔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다.

가운데 우대 등급은 등급에 드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며칠이 걸리는지 낼 수 없다.¹⁵ 삼성증권은 자동 전환의 상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이 제도의 자율규제 원문이 올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⁹ 인터넷전문은행은 현금인출기와 앱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2024년 5월에 바뀌지 않았다.² 그 해제 요건과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액·요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 2를 다섯 기관으로 한정할까닭이다.

낮은 총위에 있는 규칙은 되돌아갈 수 있다

사기이용 이력이 있는 계좌는 금액이 더 낮다. 그 통장이 일반 금액으로 돌아가는 요건은 금융위원회 발표와 다섯 기관 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이 놓인 두 총위는 협회 결의와 은행 결정으로 바뀐다. 2024년 5월처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고, 사고가 한 번 크게 나면 같은 속도로 내릴 수도 있다. 연구소는 이 되돌아갈 여지를 이 제도에 남은 가장 큰 위험으로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해제를 신청했다면 접수 날짜와 처리 예정 날짜를 문자나 화면으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신청한 영업점, 앱의 신청 내역 화면

- 2 사기이용 이력으로 금액이 더 낮아진 통장이면 되돌리는 요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 기관 민원 창구,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실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길에 올라 있으면 따로 신청할 것이 없다. 신청 내역을 받아 둘 일도 없다.

6장 · 해제 요건의 공시 표준은 법 개정 없이 만들 수 있다

가장 빨리 바뀌는 층위는 자율규제다

고칠 자리는 네 갈래이다. 갈래마다 근거가 되는 규범의 층위가 다르고, 층위가 다르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첫째 갈래는 해제 요건과 하루 금액을 기관마다 같은 양식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층위는 자율규제이고, 은행연합회가 공시 양식을 통일하면 된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므로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둘째 갈래는 급여 증빙이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 증빙 항목을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 납부 내역처럼 본인 이름으로 나오는 서류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층위는 자율규제이다. 2024년 5월 금액 상향과 같은 공동방안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표 6에서 확인된 길이 없던 처지가 여기서 열립니다.

셋째 갈래는 해제 요건의 최소 기준을 시행령에 올리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내면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방식이다. 층위는 시행령이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2023년에 권고한 방향이다. 요건이 법령에 올라오면 기관이 마음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넷째 갈래는 하루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다시 보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금액을 다시 볼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금을 바꾼다. 층위는 고시이고,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에 주기를 적으면 된다. 위임 근거는 2024년에 생긴 법률이다.

요건을 같은 양식으로 공시하게 하는 일은 협회 결의로 된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갈래가 하나 있다.

<표 7> 층위가 낮은 갈래는 빨리 바뀌고 그만큼 빨리 되돌아간다

갈래 넷 · 주체와 근거 규범의 층위 · 2026년 9월 기준 정리

갈래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① 요건과 금액을 같은 양식으로 공시한다	은행연합회와 각 기관	자율규제	협회 결의로 몇 달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 요건 자체의 불균형은 남는다
② 급여 증빙이 없는 사람의 대체 증빙을 표준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행권	자율규제	공동방안으로 반년 안팎	확인된 길이 없던 처지가 열린다 /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③ 해제 요건의 최소 기준을 법령에 올린다	금융위원회와 정부	시행령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로 1년 안팎	기관이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 시간이 걸린다

갈래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총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④ 하루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다시 본다	금융위원회	고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반년에서 1년	다시 보는 시점이 정해진다 / 올릴 근거 자료가 아직 없다

주: 총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다섯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걸리는 시간은 같은 총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절차를 놓고 본 값이고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 2023.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부록 나 자료 2).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1 새로 만든 통장의 상품 이름과 창구·현금인출기·앱 세 채널의 하루 금액을 각각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 누리집의 이체한도 안내

2 푸는 길이 서류 경로인지 실적 경로인지 확인하고, 실적 경로면 요구하는 개월 수와 건별 금액 기준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기관 누리집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급여나 연금이 석 달 이상 들어오고 있으면 서류를 떼려 다닐 일이 없다. 통장을 여러 은행에 새로 만들어 금액을 나누는 방법도 이 보고서는 적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해제 요건을 항목·개월 수·금액 기준까지 한 화면에 적는다. 다섯 기관 가운데 두 곳은 기준 없이 자동이라고만 적었고, 한 곳은 요건을 적지 않았다. 우대 등급으로 자동 해제되는 길을 둔 기관은 그 등급 기준을 함께 적는다. 기준을 적지 않은 요건은 읽는 사람에게 없는 요건과 같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것은 둘이다. 해제 요건의 최소 기준과, 이 제도로 하루 금액을 지는 사람의 수이다. 앞의 것은 시행령 총위에서 채울 수 있고, 뒤의 것은 감독당국이 기관에서 받아 모으면 된다. 숫자 없이 올린 금액은 숫자 없이 내릴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의 이름이 바뀌고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들어간다.²⁰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이 이 개정에 함께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제심판부 권고 가운데 요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두 곳에서 드러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해제 요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기관별 요건이 같은 양식으로 올라오는지도 본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한도제한계좌

새로 만든 입출금 통장 가운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낮게 정해진 통장이다. 기관에 따라 금융거래한도계좌로도 적는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통장을 열어 줄 때 무엇에 쓸 통장인지 은행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2024년 8월 28일부터 법률이 정한 의무이다.

사기이용 이력 계좌

사기에 쓰인 적이 있어 지급정지되었던 통장이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더 낮게 정해진다.

자율규제

법령이 아니라 협회와 회원사가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규칙이다.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바꿀 수 있다.

내부기준

한 금융회사가 자기 직원에게 적용하는 업무 기준이다. 밖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복지급여를 줄 때 쓰는 기준선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한다. 가계가 실제로 쓴 돈을 조사한 값이 아니다.

규제심판부

국무조정실에 있는 기구로, 규제 문제를 심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전재본

발표기관의 원문을 다른 공공 채널이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원 발표기관 이름으로 인용하고 경유 채널을 함께 적었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금융위원회, 「24.5.2.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원문 (<https://www.fsc.go.kr/po010101/82205>)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 [파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2023년 8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155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1552>)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3. [파생] 금융위원회,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2024년 8월. 정책브리핑 전재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78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788>)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4.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연혁」.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1359>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1359&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5.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연혁」.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1448>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1448&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6.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1&ccfNo=2&cciNo=1&cnpClsNo=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1&ccfNo=2&cciNo=1&cnpClsNo=1>)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7. [1차] KB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란? 계좌이체 한도부터 해제 방법까지」.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season/limit_account.html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season/limit_account.html)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8. [1차] KB국민은행, 「금융거래목적확인 증빙서류 필요한 이유는?」. <https://kbthink.com/fraud/transaction-purpose-docs.html> (<https://kbthink.com/fraud/transaction-purpose-docs.html>)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9. [1차] 하나은행,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및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 2024년 5월. https://www.kebhana.com/cont/news/news01/1501127_115430.jsp (https://www.kebhana.com/cont/news/news01/1501127_115430.jsp)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0. [1차] 우리은행, 「이체한도안내」.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IBG0022>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IBG0022>)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1. [1차] 우리은행, 「민원사례FAQ · 왜 통장을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해주나요」, 2017년 4월.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CSD0008>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CSD0008&ARTICLE_ID=2025&BOARD_ID=B00440&bbsMode=view)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2. [1차] 삼성증권,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시행 안내」. <https://samsungpop.com/ux/kor/customer/notice/notice/noticeViewContent.do?MenuSeqNo=21308> (<https://samsungpop.com/ux/kor/customer/notice/notice/noticeViewContent.do?MenuSeqNo=21308>)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3. [1차] 유안타증권, 「한도제한계좌 안내 · 해제 기준」. https://www.myasset.com/myasset/customer/bzInfo/CU_0412001_P1.jsp (https://www.myasset.com/myasset/customer/bzInfo/CU_0412001_P1.jsp)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4. [1차] 미래에셋증권, 「한도제한계좌 이용 및 해제 안내」, 2024년 8월.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guide/html/20240821133732.html>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guide/html/20240821133732.html>)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5. [파생]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2025년 8월.
정책브리핑 전재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76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762>)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6. [파생] 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K-치안 구현」, 2026년 5월. 정책브리핑 전재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98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981>)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7. [파생] 금융감독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2024년 3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889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8897>)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8. [1차] 국가데이터처 국가지표체계, 「1인가구비율」, 2026년 7월 갱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19. [1차]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6년 8월. 본문 없이
첨부만 게시.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40400&bid=214>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40400&bid=214>)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20. [2차] 『일요신문』, 「내 돈도 내가 못 뺄나요, 한도제한계좌 불만 폭증 이유」, 2022년
4월.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69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6944)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21. [2차] 『그린포스트코리아』, 「꺾기 창구 대 소비자 보호, 한도제한계좌 양면성 지속」,
2022년 10월.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3)
[idxno=20212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3)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3)
[idxno=20212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3))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22. [2차] 『전자신문』, 「시중은행 금융거래 한도계좌 한도액 5월부터 일제 상향」, 2024년
4월. <https://www.etnews.com/20240429000306>
(<https://www.etnews.com/20240429000306>)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각주

1. 금융위원회는 상향 한도를 기존 한도제한계좌에도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한도를 유지했다.
2. 시행일은 2024년 5월 2일이고, 농협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은 5월 10일부터 적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금액을 그대로 두었다.
3.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를 주는 기준선이고 지출액이 아니다. 지출 조사값인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게시물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4. 도입 시점은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2016년으로 적었다. 언론은 2015년과 2012년으로 적어 값이 엇갈린다. 본문은 1차 자료 두 곳이 일치하는 2016년으로 썼다.
5.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이다. 법률 제20368호로 2024년 2월 27일 공포, 2024년 8월 28일 시행.
6. 증빙서류 요청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년 8월 28일 시행)에 있다.
7. 하나은행은 근거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적었다.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명 확인 의무를 정한다. 이 법에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하루 금액 제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9.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2023년 8월 8일. 같은 자료에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과 감사원 2023년의 지적이 인용돼 있다.
10. 1인가구 비율은 국가데이터처 국가지표체계 값이고 2026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다.
11. 금융감독원 집계와 경찰청 집계는 세는 기준이 달라 서로 빼거나 나누지 않았다. 1건당 환산액은 같은 발표기관의 같은 기간 값끼리 나는 것이다.
12.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근거를 통신사기피해한급법 제2조의6으로 적었다.
13. 사기이용 이력 계좌는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창구 100만원, 현금인출기와 앱 각 30만원이 적용된다.
14. 일반 통장의 앱 5억원은 우리은행이 공시한 보안 1등급 1일 금액이다. 2등급은 1,000만원이고 은행마다 다르다.
15. KB국민은행이 공개한 비대면 자동 해제 요건은 우대 등급, 급여이체 실적, 연금수령 실적, 특정 통장의 주식거래 실적 넷이다. 등급에 드는 기준은 이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6. 목적 항목 수는 각 기관 공시 화면을 하나씩 세어 얻은 값이다. 하나은행은 여덟 항목과 기타 한 항목, 우리은행은 여섯 항목이다.
17. 프리랜서 항목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삼성증권·유안타증권 공시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8. 한도제한계좌 수와 해제 신청·거절 건수는 정책브리핑, KDI 경제정보센터, 국가지표체계, 국가데이터처 게시판, 다섯 기관 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9.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자율규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0. 법률 제21503호(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로 이 법의 이름이 바뀌고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들어간다.



제목	새 통장의 하루 한도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96 · NR-2026-096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새 통장의 하루 한도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넥서스 리서치 2026_96(NR-2026-096), 2026.9.13. 영구 링크 · https://nexusfmi.com/research/new-account-daily-limit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